

국제분업구조재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I. 문제제기

80년대 중반 이후 3자를 계기로 한국경제는 이전과 달리 국제수지규모의 확대와 외채축소를 달성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89년 이후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임금인상 등을 계기로 수출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최근에 다시 국제수지적자규모가 커지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3자화환시기에 투기적 축적으로 인해 산업구조조정기의 시기를 놓친 독점적 대기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제조업의 수출경쟁력강화'라는 기치하에서 대기업에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대책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제수지적자의 누적 및 수출증가세둔화를 계기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의 국제적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70년대 중반 이후 미·일의 산업구조재편

전후 미국의 축적구조=재생산구조는 사회주의권과 식민지중속, 형 사회의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대항이라는 규정 속에서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군사 중심의 신에 중화학공업중심의 주도하에서 재래형중화학공업부문이 이를 보완하는 축적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신에 중화학공업부문은 우주, 원자, 항공, 군수관련전자, 군수관련수송기계, 화학공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후 소련과의 체제간 경쟁 하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되었던 부문이다. 이 부분의 독점체제는 국가에게 독점적으로 납품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높은 이윤율을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중화학공업 중심의 축적구조는 기술혁신에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신에 중화학공업중심의 군수연관기술은 대량생산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민수용부문이나 재래형중화학공업부문에 전파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기술 자체가 대부분 비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상업화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신에 중화학공업부문을 보완하는 재래형중화학공업은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가능한 자동차, 민생용 산업용전기전자, 범용화학, 철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후 이 부문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였지만, 신에 중화학공업부문의 기술전파의 제한성과 상호관련성의 부재, 이 부분의 독점체의 특유한 지배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력하락에 직면하였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빅스리 중심의 과점적 지배

구조는 지속적인 설비투자부진을 야기하여 일본이나 EC제국의 독점체로부터 추월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기전자부문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전기전자 독점체가 기업체제가 아니라 전업업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의한 파급효과가 적었다.

군수연관신에 중화학공업 중심

와 연구개발비 그리고 높은 기술요구를 한다. 최근 미국의 독점체 및 그와 하청관계에 놓인 동아시아인종공업지역의 토착기업들은 이 부문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조립가공공정을 웨이퍼공정에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지역들은

70년대 중반 오일쇼크에 의한 순환적 공황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철저한 감량경영 합리화가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감량경영 합리화가 80년대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다. 특히 민수용철단부문에서의 합리화투자가 급격히 증대하여 이 부문에서의 기술수준이 급격히 제고되었다.

70년대 중반 이후 감량경영과 합리화의 결과 생산력수준이 급격히 제고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산업구조의 특수한 성격과 노

기조한 일본노동자제도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들 수 있다. 이는 70년대 중반 이후 감량경영이라는 자본축의 공세에 노동자제도의 무력화를 초래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서 영세기업에 이르는 복잡한 하청생산관계도 70년대 중반 이후의 기술혁신 생산력제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일 것이다.

80년대에 제2차 오일쇼크로 70년대 중반 이후의 과잉생산공황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70년대 중반 이후 추

진면에 내세워져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조치들이 부가되어 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제 측면을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 화학, 철강, 조선, 중기 등 심각한 설비과잉에 직면해 있었던 재래형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설비폐기와 인원절리, 기업의 산업전환이 추진되었다. 둘째, 재래형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의 기술수준은 70년대 중반 이후 ME산업과 결합되면서

을 지니고 있는 구조조정은 생산의 국제화가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본주의 하에서는 결코 일국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지역의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을 수반하였다. 70년대 중반 이후 유가상승에 의한 순환적 공황, 구조적 위기 이후 일본 독점자본은 자국내의 하청관계를 일국차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동아시아계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중소자본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에 의해 일본독점자본이 동아시아인종공업지역에 대해 진출하면 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동아시아인종공업지역에 자회사 내지 합작한 현지토착기업으로 하여금 현지자산을 담당하게 하여 본국이나 제3국에 있는 다른 자회사 내지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재수출하였다. 또한 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인종공업지역의 자회사 내지 하청관계에 있는 현지토착기업으로부터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졌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역수출이 증대하는 부문이 7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민생용전기전자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ME혁명을 계기로 일본은 민수용철단 산업부문 정보, 통신, 산업용 전기전자, 공작기계, 첨단화학, 정보처리산업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등 자동화관련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반적으로 재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수용부문의 범용부문에서는 동아시아인종공업지역과 합작 생산하여 이 부분에서도 다른 선진제국에

더라도 아세안제국은 지금처럼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86년 이후 원연료가격의 하락 및 불안정으로 인해 아세안국가들의 경제는 극히 불안정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8년말부터 아시아닉스에 가해졌던 미국의 통상압력, 자본 및 시장개방요구는 아세안의 새로운 축적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아시아닉스에서의 노동자제도의 임금인상투쟁 및 중산층의 민주화운동은 아시아닉스의 지배적 자본으로 하여금 새로운 축적조건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닉스들은 산업구조고도화를 고도화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노동절약적 경영업부문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대만, 한국등의 아세안으로의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들지역으로의 노동절약적 공정의 이전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85-88년동안 급속히 증가하였던 일본의 기업들도 동아시아닉스에서의 외국인기업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 임금상승에 직면하여 생산지지를 아세안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89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아시아닉스에 대한 투자증가속도는 아세안에 대한 그것보다 현저히 둔화되었다.

미·일, 아시아닉스간의 생산연관은 이제 아세안까지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89년 이후 일차산품가격의 하락으로 심각한 경제부진을 겪고 있었던 아세안은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및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및 일본자본의 유치를 위해 투자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일본 및 아시아닉스의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는 이들지역의 공업화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여 아세안국가들은 대단히 빠른 성장을 보여왔다. 일차산품중심의 산업구조로부터 탈피속도도 대단히 빨랐다.

한·미·일국제분업구조에 이제 아세안까지 가세하는 중층적 분업구조 하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 및 일본시장에서의 대만 등 이웃 경쟁국들 뿐만 아니라 아세안으로부터까지 그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표현되고 있는 정부의 대책 역시 이러한 불안감에서 제출된 사후약방문식의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것은 노동자제도의 생활조건개선을 통한 기술수준고에 대한 의혹의 고취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보다는 독점적 대기업에 대한 편중적 지원 및 특별로 점철된 극히 반민중적인 대책인 것이다.

전 창 환
(충남대 감사·경제학)

◇한국경제구조의 이해와 합리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시리즈<2>

산업구조조정 필요인가?



◇70년대 후반 이후 2회에 걸친 과잉생산공황은 선진국들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일 독점자본, 축적한계 극복 위해 신흥공업국 진출 선진국·'아세안' 분업구조 무역 불안정 심화시켜

기존의 재조정을 수적으로 재통합화하거나 단위공정, 예를 들면 조립가공공정의 자동화=일괄생산체계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조정은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산업에서 자동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미국 독점체들은 진출대상지역에서의 고용불안정 기술인력확보의 예로 노동조합운동의 교양 등에 직면하여 재의생산지지를 본국으로 철수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지역내의 지역적 재편 및 재의생산지지의 이동등으로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동아시아인종공업의 경제는 이전보다 더 불안정한 경제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동아시아인종공업지역의 구조조정 역시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자본계의 변화 나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사이의 복잡한 하청관계 때문이었다. 우선 산업구조부터 살펴보면, 일본의 산업구조는 재래형중화학공업, 그중에서도 조립가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ME혁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산업의 특이한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의 전기전자산업부문의 독점체는 대부분 기업체제로서 중한 전기전자업체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민수용 산업용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한 부문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다른 부문으로 기술이전이 용이하며 서로 기술혁신에 상승작용을 한다. 이러한 측면은 미국의 ME혁명의 성격과 본질적인 차이를 구성한다. 둘째, 노동조합운동의 기업내부의 진전과 그에 따른 투쟁력상실에

진되었던 합리화가 보다 강도높게 진행되었다.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다른 선진제국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을 때에도 일본은 이전과 같은 고착적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점자본은 국가에 대해 종래의 고도성장시기에 행해졌던 제도와 정책을 본질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바로 80년대 초반의 일조행위이다.

이러한 구조는 85년 플라자합의에 의한 엔고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구조조정으로 발전하였다. 경제구조조정은 1986년 나카소네수상시절에 前川보고서로 제출되었으며, 그 이후 다케시다는 이를 이어받아 신경제계획(경제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수출지향적 경제구조에서 내수주도형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자동차 합리화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또한 70년대말부터 미국 및 EC제국 등 선진제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일본의 독점체들은 이러한 기술수준을 기초로 하여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의 현지생산을 추진하였다. 셋째, ME관련기기 컴퓨터 광통신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을 기초로 하여 신소재 생명공학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의 결과, 일본의 독점체들은 생산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의 체계화 등 ME화를 기술적 수단으로 하여 대대적인 합리화를 추진하여 노동자제도에 보다 공세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본질상 착취 수탈관계를 재생산하는 노사관계의 재편의 성격

비해 경쟁력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일본보다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고 이 부분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동아시아인종공업지역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본은 엔고를 계기로 기존의 상품수출을 통한 분업연관에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과의 분업연관을 보다 구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III. 80년대 후반 아세안의 동아시아국제분업구조의 편입과 그 귀결

플라자합의 이후 3년동안 아시아닉스가 급속한 성장과 수출증대를 보이고 있었을 때까지만 하

여기 빛을 비추십시오!

상이탑의 學窓에 비치는 진리의 등불 /
대학생 여러분이 지키고 가꾸어 온 학문의 빛을 여기 삼양사에 비추십시오.

올해로 2회째 「대학생 논문현상공모」를 실시하는 삼양사는
여러분들의 절타마를 곁에서 지켜보며 고동소리 드는 산업현장과
상이탑이 만나는 생생한 산학협동의 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젊음의 패기와 이상을 삼양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논제(아래 논제중 택일)

- 유통산업개방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대응방안 (식품업체 중심)
- 고임금시대의 기업의 대응방안
- 소비자 Needs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 기업의 정년퇴직자 활용방안
-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2. 상 금

- 최우수작 1편 : 200만원과 상패 ●가작 5편 : 각 50만원과 상패
- 우수작 2편 : 각 80만원과 상패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3. 응모자격

-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4. 응모마감일

- 1991년 10월 31일 (목)

5. 당선작 발표

- 1991년 11월 29일 (금), 당선작 개별통지 및 월간리크루트, 월간캠퍼스저널, 대학신문에 공고

6. 응모요령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8매 내외의 요약분 첨부 요망)
- 1인당 응모편수 및 2인이상 공동제출 제한 없음
- 제출처 : 당사 총무부 인사과
- ※ 우편접수시 당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번호 110-725,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번지
- (주) 삼양사 총무부 인사과 논문현상공모 담당자 앞

7. 기 타

-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고제출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성명·전화번호 명기 요망
- 타기관에 제출한 유사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됨
- 가능한 원고는 타이프나 워드프로세서로 인쇄하여 제출 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총무부 인사과로 전화문의의 요망 (TEL. 740-7155~7) 1991년 9월



삼양사